

“연평균 50% 급성장… ‘사용후 배터리’ 거래시장 만들자”

배터리 얼라이언스

정부에 통합관리체계안 제출
폐기물 아닌 ‘재활용 대상’ 재정의
통합이력관리 ‘여권제도’ 도입제안

자동차와 배터리업계가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민간 주도의 거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정부도 업계가 제안한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관계부처 논의와 관련 법률안 입법도 추진키로 하면서 사용후 배터리 거래시장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배터리 3사와 현대차 등이 참여하는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이날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에는 배터리 및 자동차회사는 물론, 재제조·재사용·재활용기업, 폐차업계, 보험업계 등 24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업계안을 보면, 우선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앞줄 왼쪽 네 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전달식에서 박진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으로 부터 업계 건의서를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재사용)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현재는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실정이다.

업계안은 20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

리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현물/선도 거래나 직접/중개 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존재하고, 유통업이나 리스·교체업, 운송·보관업, 성능평가업 등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도 가능해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등을 담

보하기 위한 최소 장치로 사용후 배터리를 확보·유통·활용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설정했고, 모든 거래의 결과는 정부 시스템에 등재하기로 했다.

배터리의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가칭)배터리 여권제도’ 도입도 제안됐다. 배터리를 취급, 유통하는 사업자들은 배터리 전주기에 걸쳐 배터리 조성·식별 정보, 유행중 사용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추적된 정보는 건전한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배터리 공급망 및 안전성 강화에 우선 활용되며, 일부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 등에 제공돼 배터리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 정보로 쓰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의 안전관리 체계도 포함됐다. 배터리 상태별, 제품별로 안전 규정은 개별 규정에 산재해 있거나, 제도가 공백인 경우도 많다. 이에 업계는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전 검사(배터리 탈거후) → 제품 안전검사(ESS 등 제품으로 제조후) → 사후 검사(제품 설치후)’ 등 3단계에 걸친 검사 체계를 제안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업계안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며 “업계안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 등을 적극 추진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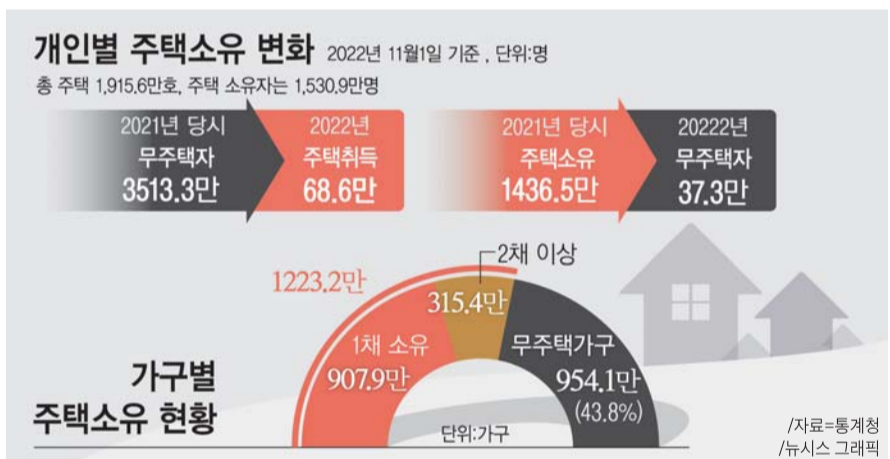
작년 69만명 ‘내집마련’… 매수심리는 하락

통계청, 2022년 주택소유통계
유주택자 된 사람 전년비 33.7% ↓
다주택자서 1주택자로 변경 21만명

지난해 아파트 등 주택을 매입한 무주택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 기조 및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매수심리가 얼어붙은 탓으로 풀이된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무주택자였다가 작년에 유주택자가 된 사람은 68만7000명으로 2021년(103만6000명)보다 33.7% 감소했다. 이 같은 신규 유주택자 수는 2019년(83만2000명)에 줄었다가 2020년(98만 명)부터 2년 연속 증가한 바 있다. 3년 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다. 한편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37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2건 이상 소유에서 1건 소유로 변경된 사람은 21만 명이었다.

지난해 총 주택수는 1914만6000호로 1년 전보다 1.2%(19만 호) 증가했다. 이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643만2000호(85.8%)로 2021년(86.3%)에 비



해 비중이 줄었다.

개인이 소유한 주택 중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은 1424만2000호(86.7%),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219만호(13.3%)를 차지했다. 부부 공동명의 등 공동소유 비중은 2019년에 12.5%, 2020년 13%, 2021년 13.2% 등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늘었다. 전체 주택 보유자 중 여성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2022년 말 기준 45.9%에 달했다.

주택소유자는 1530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5%(22만명) 늘어났다. 다만 1인당 평균 소유 주택수는 1.07호로 전

년(1.08호) 대비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1년에는 주택이 없다가 신규 참여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1인당 평균 소유 주택수가 감소한 바 있다”며 “2022년에는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줄어드는 등 변동 자체가 적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소유자 1530만9000명 중 1건만 소유한 사람은 전년보다 21만9000명 감소한 1303만5000명이었다. 비중으로 보면 1건만 소유한 사람은 전체의 85.1%를 차지해 0.2%포인트(p)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유럽연합 공급망실사법·ESG 동향 공유”

환경부,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 토론회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 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법(지속가능한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을 비롯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국제사회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며 “국내의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 우수사례 소개 및 산업계 대응 방향 논의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독일 등이 도입한 공급망 실사법은 아동노동과 현대판노예제, 강제노동, 차별금지, 산업안전보호, 적절한 임금 미지불 등 11가지 유형의 인권침해와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물질 사용 등 환경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행사에는 수출업계 실무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창흠 환경부 기

후탄소정책실장과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요르그 베네펜뒤르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공사참사관, 독일 화학기업 헬름의 노버트 바움 부사장 등 이다.

1부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민 변호사가 ‘공급망 실사 지침의 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또 독일 석유화학기업 바스프의 남경경 그룹리더가 ‘기업의 실무적인 공급망 실사 준비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 실제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날 논의된 공급망 실사 대응방안을 검토해 수출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기업들이 ESG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 기아 등과 온실가스 감축 MOU

농축산 부문 저탄소 생태계 전환 협력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기아, 신한은행, 탄소중립 솔루션기업 그리너리와 함께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농식품부와 각 기업들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가축분뇨의 신재생에너지화 촉진, ▲지능형(스마트) 축산사

업 협력 등 국내 농축산 부문의 저탄소 생태계 전환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탄소저감 효과 연구 및 측정,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 등 자발적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중장기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심화되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는 사례”라며 “기아와 신

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경북 의성군의 가축분뇨 자원화 실증 시범 사업의 바이오차(Biochar) 생산 프로젝트를 10년간 우선 지원하고,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여 경영상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설은 축산 농가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 중 하나인 가축분뇨를 영상 350℃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해 만든 펠릿 형태의 고체비료인 바이오차를 생산한다. /차상근 기자 skc8472@

산재예방 국고보조금 누수 방지 맞손

안전보건공단-SGI서울보증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14일 공단 본부에서 SGI서울보증과 ‘보조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유기적·효율적 보증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협약이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보조금 환수 시 보조금 수혜 사업장의 재정부담 완화’ 및 ‘국고보조금의 재정 누수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보조금은 ▲고위험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안전동행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등이다.

공단은 2017년부터 보조금 지원대상인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보조금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공단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조지원결정 취소에 따른 환수 시 최대 2~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추가 징수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지급 및 하자(A/S)보증에 대한 특약 ▲공단 맞춤형 상품개발 ▲전담 창구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